컷오프 끝낸 국힘, 본격 당권 레이스

3·8 전대 당대표 후보 확정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오늘 제주 시작 합동연설회
16일 광주·전남·전북 개최
내달 4일부터 나흘간 투표

황교안(왼쪽부터), 천하람, 안철수,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월8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고 윤상현·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은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가 진출했다. 현역 의원인 이만희·박성중·이용 의원과 문병호·천강정 후보는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다. 지성호 의원과 구혁모·김영호·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욱희 후보는 떨어졌다.

당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진출자만 밝힌다는 방침이다.

본경선 진출자들은 발표 이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더 나은 미래 서약식'을 열고 공정한 경쟁과 선거 결과 승복을 서약했다.

당 대표 후보로 결정된 네 후보는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현 후보는 "당원과 호흡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하겠다"며 "이웃이자 동맹, 우방국인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만큼 캠프 차원에서 홍보와 각종 선전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차분한 경선을 치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 당 대표 후보를 뽑는 기준은 내년 총선에서 누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라며 "반드시 모든 사람이 힘을 바쳐 총력을 다해 우리가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돼야 윤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천하람 후보는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타령할 때가 아니고 국민 삶에 문제가 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 있는 역량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께서 평가하면 총선 승리, 수도권 승리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는 "30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정권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후보들은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 2일 서울·인천·경기 순으로 열린다.

이들은 15일을 시작으로 4차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당 대표 토론회 일정은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로 잡혀있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와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는 27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중계로 진행되는 공개 토론회를 한차례 진행한다.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오는 3월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모바일 및 ARS 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는 3월 4~5일,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3월6~7일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본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당 대표 선거는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 투표는 모바일 3월10일 오전 9시~오후 5시, ARS 3월 11일 오전 9시~오후 6시 진행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방소멸 대안' 지역활력타운 7곳 공모 시작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복합 지원
7개 도 기초단체… 상반기 내 선정

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복합 지원하는 지역거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부처 협력을 총괄한다.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를 전담 운영하고 지역개발사업 인허가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 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 분양과 임대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부는 돌봄·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비도시 지역 내 필수 생활서비스, 해수부는 어촌 유치 시 경제·생활 기반시설 구축,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조성 연계사업을 각각 마련한다.

광역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및 작은도서관·영화관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도(道)의 기초단체다.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거쳐 6월 중 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국토부 지역개발정보시스템(www.rdis.or.kr)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임박

부결 가능성…민주, 표 단속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례의 검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결속력을 다지며 '이탈표'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요구대로 소환에 응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이 2월 말~3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과 연이은 소환조사에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야당 탄압성 성격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심이 민주당 안에서 팽배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이었다.

다만, 일각에선 '반명계(반이재명계)' 의원들중 일부가 가결에 투표한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100% 부결 또는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이번 주 전원토론회서 선거제 개편 공론 수렴 시작"

"무임승차 70세 상향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번 주 당 정치혁신위원회 주관의 국회의원 전원 토론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내 공론 수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선거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준연동형 제도를 실험해봤지만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 전체 의석수 부족 등 때문에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또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의가 아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 등을 고려해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다 나은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와 연금이 매우 안정적이면 70세 연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분의1에 불과하고 노인 빈곤율이 4배나 높고 노인 복지연금이 취약한 상태라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 2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 문제 합의가 늦어진다면 국가보훈부와 동포청 관련 입법을 먼저 추진하자고 한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행안위에서 관련 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소병철 '해룡면 복원' 순천 선거구 정상화 결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순천에서 연 '당 전진대회'에서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의 위상에 걸맞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뜻을 모으고,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채택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순천 시민들이 더 이상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해룡면 복원 등 순천 선거구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